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7. 6.(목)

□ 경남 기사

- 드러나는 '유령아동'...진주서도 미신고 영아 유기 (경남신문)
 - 경찰, 사망 시점·유기 장소 등 수사
- 도내 노동계 "반노동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 (도민일보)
 - 내주 대행진·촛불집회 등 예고

홍 보 담 당 관 실

드러나는 ‘유령아동’... 진주서도 미신고 영아 유기

부모, 2017년 출산 후 양육 중 사망 주장
경찰, 사망 시점·유기 장소 등 수사

도내 수사의뢰 33건 중 2명 사망 확인

속보= 거제에 이어 진주에서도 미출생 신고된 영아가 사망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건수도 늘고 있다. (4일 1면)

경남경찰청은 5일 출생 미신고 전수 조사와 관련해 전날 오후 2시 기준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통보된 사건이 모두 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한 아동은 118명에 이른다.

도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이에 도내 수사 건수는 지난 3일 10건에서 다음날 33건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수사 건수가 400건에 이르는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에선 거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부부가 구속된 데 이어 진주에서도 6년 전 출산한 아동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경남청은 진주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알아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숨진 영아는 2017년 1월께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모는 당시 20대로 산모의 친정에 영아를 맡겨 양육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현재 30대인 부모는 아기 한 명을 더 출산해 정상 출생 신고를 하고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영아의 시신은 2021년 고인이 된 친정 할머니가 물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아의 사망 시점 등 정확한 경위와 함께 다른 범죄 가능성, 아기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청은 지난 4일 거제 사망 영아의 시신을 찾기 위해 70명을 동원해 고현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김재경 기자

< 여청과 통보 >

慶南日報

2023년 7월 6일 목요일 004면 사회

만취해 역주행한 40대 남성 검거

심야 시간 만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정께 진주 명석면 인근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하는 운전자 A씨에게 정차 요구를 했지만, 불응하고 순찰차량을 네 차례 충격을 가하고 도주했다.

그렇게 20여 분 동안 20km를 내달린 A씨는 진주시 신안동에 위치한 천수교에서 추격해 오던 순찰차와 부딪힌 후 전도되면서 붙잡혔다.

A씨는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경찰에 체혈을 요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운전을 했고, 역주행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와 마약 여부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했고, 결과를 받는 대로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 112상황실, 교통과 통보 >

慶南日報

2023년 7월 6일 목요일 005면 사회

진주성 북문 인근 5t 트럭 전도

고철 수거 5t 트럭이 진주성 북문 인근 도로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고철 수거 5t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산청에서 고물을 싣고 진주 상평동에 위치한 고물상으로 향하던 중 진주성 북문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웅교기자

< 교통과 통보 >

도내 노동계 “반노동 정권 퇴진” 총파업 결의

IAEA 오염수 검증 결과 비판도
내주 대행진·촛불집회 등 예고

경남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노조 탄압 중단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다.

총파업 돌입 사흘째를 맞은 5일 오후 5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노총)는 창원시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이 참여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정책을 견지했고,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결의했다”며 “정권 퇴진은 온 힘을 모아 야 가능한 만큼 모든 계층이 함께 일어나 싸우자”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와 IAEA 오염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오염수는 안전 기준에 맞다는 IAEA 검증 결과가 발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 전국동시다발 경남지역 총파업 승리결의대회 및 경남민중대회가 5일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됐다”며 “우리 어민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창원스포츠파크~운동장사거리~용지사거리~창원광장~KBS창원 앞까지 1톤 트럭 50여 대를 몰고 행진을 벌

였다. 이들은 행진을 마친 후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총파업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에서 동시에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오는 12일에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와 대행진이 예정돼 있다. 오는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등이 열린다. /최석환 기자 csh@idomin.com

< 정보과 통보 >

상습 폭행·흥기 위협·옷장에 가두고 열고문·성적인 모욕...

도내 기숙형 고교서 수개월간 ‘학폭’

올 3~5월 상급생 4명에 집단 괴롭힘
교육청 심의위, 학급 교체 등 처분
피해 학부모, 조치 반발...소송준비
교육청 “심의기구 결정 관여 못해”

최근 도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상급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괴롭힘과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취재 결과, 올해 3월 A고등학교에 입학한 B학생은 입학 후 2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4명의 상급 학생들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욕설과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3월부터 5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상급생 4명으로부터 둔기 등으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밤이 되면 상습적으로 열차려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샤워를 하면서 B군의 몸에 침과 가래를 뱉는가 하면 오줌을 누고 냉수를 끼얹기도 했으며, 부모를 빚댄 성적인 의미의 욕설을 하면서 B군의 베개에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흥기로 위협을 가하고,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열고문을 가한 사실도 관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B군은 결국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집단 폭행 사실에 대해 B군이 이날 집으로 돌아와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일 B군의 학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B군에게 ‘안심위치’를 지급했다.

B군은 이번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 지원을 받아 심리상담도 하고 있다. B군의 학부모도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아이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자 지난 6월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각 6~16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사실에 비해 처분 결과가 상식을 벗어나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해 “어느 공간에서든 가해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며 “제대로 숨도 못 쉬겠다. 고통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B군의 학부모는 “최소한 전학 처분은 내려질 줄 알았다. 그런데 가해자가 버젓이 같은 학교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심의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심의위 결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복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여청과 통보 >

‘사고뭉치’ 두 바퀴 이동수단

최근 5년간 가해 교통사고 7000여건 ‘속출’
가해 운전자 56% 안전의무불이행이 사고 원인
경찰, 시·군 관계기관 합동 위법행위 단속 진행

오토바이, 자전거 등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동수단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사망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PM(개인형이동장치) 등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동수단의 ‘가해운전자 교통사고’가 12만 9853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09명이 사망하고, 15만 935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별로 살펴보면 이륜차가 8만 60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전거 2만 6973건, 원동기자전거 1만 1104건, PM 5690건 순이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7108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40명이 숨지

고, 82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륜차 사고가 경남에서도 매년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963건, 2021년 1068건, 2020년 1024건, 2019년 1045건, 2018년 77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7.3%에 달한다.

자전거와 원동기자전거, PM은 각각 1196건, 1010건, 16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는 227건·151건·80건, 2021년은 224건·146건·53건, 2020년 228건·237건·16건, 2019년 281건·153건·7건, 2018년 216건·195건·4건이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법규 위반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 2만 5808건 중 가해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 1만 4463건 (56.04%)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4323건, 안전거리 미확보 1374건, 중앙선침범 1156건, 교차로운행방법 위

반 1021건이다.

이처럼 매년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무법운행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팀, 사이카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도심권 이륜차 등의 사고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연 4회 실시하는 ‘테마단속활동’에 이륜차와 PM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앞서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단속활동에서 도내 이륜차 1만 6109건, PM 1415건을 단속했다.

이외에도交通安全공단,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 위법(법규위반 등)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청소년, 노인 등 두 바퀴 이동수단 이용자 2만 7000여 명에 대한 사례 중심의交通安全 교육도 진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구조상 두 바퀴 이동수단은 도로에서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교기자 kyo1@gnews.co.kr

< 교통과 통보 >

남해경찰수련원 신축사업 속도

이달 감정평가·관리계획변경 공고
9월까지 매각 등 행정절차 마무리

속보= '남해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분할 측정, 관리계획변경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14일 6면)

류해석 부군수 등 간부는 5일 오전 임태식 군의회 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7월 정례의원 간담회'에 참석, 경찰수련원 신축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이날 경찰수련원 신축과 관련,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이미 확보한 국비 214억원과 추가 확보 재원 201억원 등 총 415억원으로 서면 스포츠

파크 바다구장 일원 2만2316㎡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146실 규모의 수련원을 지을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군은 또 이달까지 해당 부지 2만2316㎡에 대해 감정평가·분할측량한 뒤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체육시설 용지에서 해당 부지를 제척하는 군관리계획변경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와 함께 오는 8월에는 군관리계획심의고시 절차를 밟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9월에는 매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이날 남해군 청사신축사업 추진현황, 인구감소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 가입 계획 등 7건에 대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병문 기자

< 경무과 통보 >



함안경찰서·경우회 등 마약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함안경찰서(서장 김상호), 함안 경우회(회장 조문규), 전·의경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4일 가야읍 일대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에서 합동 예방 캠페인을 실

시했다. 이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최근 청소년까지 확산추세에 있는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김명현 기자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승소

대법원 김해시에 손들어
내년 7월 아파트 입주 가능

김해 안동1지구 아파트 개발을 놓고 일부 지주와 김해시가 벌여온 소송에서 김해시가 최종 승소했다.

김해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등에 하자가 있다며 지주 11명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면서 최종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해시는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이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지주 11명이 낸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등 무효 확인 소

송에서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사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3년을 끌어온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은 마무리됐다. 또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1400세대 계약자들도 입주와 함께 건축물 등기 행사를 지장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내년 7월 예정인 1380세대 입주도 가능하게 됐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안동공단 일대를 주거지와 상업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이 2780세대를 지어 분양하고 도

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A씨는 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수용에 필요한 도시개발법 동의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위법하게 충족했다며,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수용재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김해시가 처분한

후속 행정절차를 줄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지구 지정 취소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아파트 사업은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송 지주들이 경남도에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다툼은 지주들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시는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두성산업 중처법 위반 혐의 재판 또 연기

노동자 집단 독성간염 사건
환경부에 화학사고 해당 문의
결과 늦게 나와 공판 미뤄져
노동계, 업체 시간 벌기 우려

노동자 16명이 집단으로 독성간염에 걸린 두성산업 사건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환경부에 요청한 사실 확인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더 늦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218호 법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결심 공판이 9월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화학 사고로 볼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부에 사실확인 조회를 신청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피해자 대리인 김태형 변호사는 “만일 환경부에서 화학 사고로 보고 검찰에서 기소 내용을 추가한다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케미칼과 대흥알앤티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공판 일정 연기에 동의했다. 두성산업은 환경부의 사실확인 조회 결과와 상관없이 결심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했으나 다른 업체에서 속행

을 요청한 것을 보고, 공판 연기에 동의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업체들은 뒤늦게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유성케미칼은 최근해야 피해자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지난 4월 집단 독성 간염으로 피해 본 노동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형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양형 조사는 피해자 처지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업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며 “재판 일정이 길어지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확대 진주시, 타 예산 가져와 쓰기로

지원금 없어 중단될 위기 모면
치료 횟수 50회 차로 늘리기로

경남 진주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예산이 소진돼 치료에 난항(부산일보 6월 30일 자 1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치료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5일 진주시에 따르면 당초 12회 차로 끝날 예정이었던 피해아동 심리치료 횟수를 50회 차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필요 예산은 5000만 정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 채워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피해아동과 학부모 치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확보했다. 피해아동 7명과 학부모 6명이 지역의 한 발달센터에서 각각 놀이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일반아동에 비해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예정된 12회 차에 6회 차를 더했는데 추가치료에 대한 예산이 없어 애를 먹었다.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이제 겨우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중단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시가 적극적인 치료 지원을 약속했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다시 악화될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시가 50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다소 누그러지게 됐다. 시는 특히 이번부터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피해아동 15명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형제, 자매까지 심리치료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애아동의 심리치료 적정회수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문제행동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최대 50회 차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앞으로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진주시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치료범위를 넓혔다. 상담 초기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도 상당히 안정을 찾는 등 치료효과가 있어 보다 장기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

삼성重 현장직 50년 만에 노조 설립

삼성중공업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장 노조 설립은 1974년 삼성중공업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삼성중공업노동조합은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시로부터 지난 4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노조설립신고증에는 '최길연'이 대표자로 돼 있지만 노조원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거제시장 명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한다'고 적혀 있다. 삼성중공업에는 사무직 노조만 있었다. 현장직은 지금까지 노조가 아닌 노동자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단체교섭권 등 권

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삼성중공업 현장 노조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조 상급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직영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현장직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길연 위원장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조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사각지대 없도록 영·유아 관리 관심 지속돼야

기자의 시각



정웅교
취재부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없는 ‘유령 아동’이 전국에 223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122명으로 파악돼 경기 641명과 서울 470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된 후 영아 살해·유기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거제에서는 부모가 지난해 9월 9일 아이를 낳은 후 5일 만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에서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영아들이 발견됐다는 경찰조사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배돼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법원, 주민등록은 행안부,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생신고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유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하고,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통과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신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정치권은 두 법안이 동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정부는 시행된다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영아를 위한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기숙형 학교 학생폭력, 아직도 해법 못 찾나

기숙형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또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월 산청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또 같은 양상의 폭행이 일어났다. 올 3월 도내 기숙형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은 수개월간 기숙생활 중 상급생 4명으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욕설과 폭행,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둔기 구타와 상습적 일차려는 지속적이었다고 했다. 피해 학생은 참다 못해 학교를 빠져나왔고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서 표면화됐다. 관할 교육청은 가해학생 4명에 출석정지 등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학생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숙형 학교에서 벌어져 온 폭력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 간의 다툼으로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등·하교가 자유로운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기숙이라는 공간에서 폭력과 집단괴롭힘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관찰을 꼼꼼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개월

동안 신입생을 괴롭혀 왔는데도 학교 측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 5년간 기숙사 학폭이 1100건에 피해학생 수도 약 1800명이 됐다는 교육부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숙형 학교에서 학폭이 빈번하다는 것을 학교 측이 인지하고 관리와 대처에 임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대수롭게 여긴다면 피해 학생과 상처받은 학부모만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화될 소지가 크다.

학교폭력 문제는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그 근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기숙형 학교는 고질적 학폭과 학폭의 대물림 우려가 크다. 그래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폭이 근절되지 않고, 관리감독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시한폭탄을 방치한 꼴이다. 이번 기회에 학폭의 근본 대책은 물론 기숙형 학교의 자유 시간, 야간시간, 취침시간 등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해 학폭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두들겨 맞으면서 공부해야 한다면 이게 학교라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날씨

낮 기온 32도... 습도에 땀 뻘뻘
6일 부산 울산 경남은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웠겠으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높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7월 6일 (음 5월 19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80 자외선 80 피부 60 냉방 80 빨래 80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 맑은 후 구름많음, 구름많은 후 맑음, 흐리고 비, 소나기, 한때 비, 천둥번개, 흐리고 비눈, 흐리고 눈

해돋이/해짐 05:15 19:42 달돋이/달짐 22:21 07:59

물때

	밀물	썰물
부산	10:27 22:56	04:11 16:17
인천	06:53 19:08	00:36 13:23
포항	16:45	00:43
통영	10:49 23:34	04:50 16:46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서-서	6-9	0.5~1
남해동부	남-남서	3-7	0.5~1
동해남부	남서-서	5-10	0.5~1.5
동해중부	남서-서	6-10	0.5~1.5
서해중부	남-남서	4-10	0.5~2
서해남부	남서-서	6-9	0.5~1

주간날씨

	7 (金)	8 (土)	9 (日)
부산	☁ 23-25	☀ 23-27	☁ 23-28
울산	☁ 22-27	☀ 23-30	☁ 23-29
진주	☁ 22-25	☀ 23-31	☁ 24-30
김해	☁ 22-27	☀ 24-30	☁ 23-30
창원	☁ 22-26	☀ 23-30	☁ 23-29
통영	☁ 22-25	☀ 23-27	☁ 23-27
대구	☁ 22-29	☀ 24-32	☁ 24-32
세종	☀ 23-29	☀ 23-30	☀ 24-31
서울	☁ 23-31	☀ 23-31	☀ 24-30
제주	☁ 24-31	☁ 25-30	☁ 25-31